

“지반침하에 40m높이 기계식주차장 기울려”

광주 서구 화정동 상인들, “아파트 공사에 지반 침하” 주장 기울기 확인됐지만 상인·시공사 각각 주장 달라 ‘원인 불명’ 서구, 민원 접수·중재 중...”협의 위한 3자 대면 자리 만들 것”



광주 도심 한 상가에 떨어진 40m 높이 기계식 주차장이 알 수 없는 이유로 기울어 상인들이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상인들은 바로 옆 아파트 신축 공사로 지반이 가라앉아 주차장이 기울어 있는 것이라고 주장, 지자체를 향해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1일 광주 서구 등에 따르면, 지난 1월 서구 화정동 한 상가 상인들의 집단 민원이 제기됐다.

상인들은 지난 2022년부터 주변에서 진행 중인 아파트 신축 공사로 인해 지반이 가라앉고 있다고

주장, 인접한 기계식 주차장이 기울어 무너질 위험을 호소했다.

상가 주차장에는 지난 2003년 상가 준공과 함께 지어진 40m 높이 기계식 주차장이 건물과 붙은 상태로 설치돼 있다. 현재는 설비 노후화로 사용되지 않고 있다.

상인들은 실제 기계식 주차장이 기울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자 지난달 서구가 지정한 안전진단 전문기관을 통해 구조물 기울기를 측정 받았다.

상인들이 의뢰한 기울기 측정 결과 주차장은 남서

방향으로 기울어 있는 것이 확인됐다. 기계식 주차장 주변 6곳에서 측정한 변위값은 60mm~205mm 까지로, 6곳 중 3곳이 ‘구조물의 구조적 손상이 예상되는 한계’에 해당하는 기울기 점수를 받았다.

상인들은 오는 7월 준공을 앞둔 바로 옆 아파트 공사 과정에서의 문제를 제기했다. 시공사가 지하주차장을 파고 내려가자 기계식 주차장 아래 지반을 떠받치고 있던 지하수가 유출돼 지반이 침하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상인들은 “지반이 무너져 주차장이 기울었는데 언제까지 가만히 두고 있을 것인가. 무너지기라도 하면 상가는 물론 대로변까지 파헤쳐 막심할 것”이라며 “시공사는 지반이 무너진 책임을 인정하고 기계식 주차장 철거·신축에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구는 민원에 따라 안전관리자문단을 현장에 파견해 기계식 주차장의 경사·균열을 측정, 주차장이 기울어 있는 것을 확인했지만 추가적인 결함 발생·진전 가능성은 없다는 판단을 받았다.

공사 초기 설치된 지표침하계가 터파기 공사를 마치는 시점까지 기록한 값을 분석해도 지반의 변이가 확인되지는 않았다고도 했다. 건축업계에서는 대체로 지표침하계 설치 기간 관측 되지 않은 지반침하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없을 것이라고 판단한다고도 설명했다.

이밖에 당시 진행된 구조물 안전진단검사 결과에서도 ‘보통’에 해당하는 등급이 나왔다고도 덧붙였다.

시공사도 ‘공사 이전부터 지반이 침하한 상태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만큼 서구는 상인·시공사와 3자 대면 자리를 만들어 문제 해결에 나설 뜻을 밝혔다.

서구 관계자는 “지반 침하가 100% 없을거라고는 단정할 수 없다. 다만 지반 침하의 인과 관계에 대해 상인들과 시공사 사이 주장이 달라 점점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조만간 서로의 입장을 주고받을 수 있는 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변용일기자



장흥경찰, 5월 청소년의 달 맞아 우수 대상자에게 포상 수여

장흥경찰서(서장 박흥원)는 지난달 30일 청소년의 달을 맞아 모범이 되는 청소년·일반인에게 각각 전남청장 표창 및 감사장을 수여하였다.

서부취재본부



신안소방, 초등생 대상 소방서 견학 프로그램 운영

신안소방서(서장 류도형)는 지난달 29일 암태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소방서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서부취재본부



담양소방,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홍보 배너 설치

담양소방서(서장 이중희)는 소방시설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홍보 배너를 담빛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 3개소에 설치했다고 밝혔다.

담양·박종영기자



곡성소방, 보건소·의료시설 관계자 소방안전 간담회 실시

곡성소방서(서장 박용주)는 곡성시방병원 관계자 및 곡성군 보건소 직원들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곡성·양해영기자



완도소방, 봄철 부주의·전기 화재 예방 캠페인 실시

완도소방서(서장 박춘천)는 건조한 봄철을 맞아 화재 발생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군민들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봄철 부주의, 전기 화재 예방 홍보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서부취재본부



광주 남부소방, 2분기 긴급구조통제단 불시가동훈련 실시

광주남부소방서(서장 박충훈)는 지난달 28일 대형 재난 발생에 대비해 긴급구조통제단 불시가동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서선욱기자

“엄마 두고 왜 가냐”...해군 초계기 순직자 눈물의 영결식

박진우·윤동규·강신원 대전현충원, 이태훈 영천호국원에 각각 안장돼

1일 오전 경북 포항 해군항공사령부 강당에서 초계기(P-3CK) 추락 사고로 순직한 승무원 4명의 합동 영결식이 해군장으로 거행됐다.

순직 장병은 정조중사 박진우 중령(해사 68기), 부조중사 이태훈 소령(해사 73기), 전술사 윤동규 상사(부사관 260기), 전술사 강신원 상사(부사관 269기)다.

양용모 해군참모총장 주관으로 열린 이날 영결식에는 군 주요 지휘관, 해군·해병대 장병과 시민 등 1000여명이 참석했다.

영결식은 순직장병에 대한 경례, 약력 보고, 해군참모총장 조사, 항공사령부 장병 추도사, 종교 의식, 헌화 및 분향, 묵념, 조종, 영현 운구 순으로 진행됐다.

박 중령의 세 살배기 아들은 아버지 관 앞에서 장난감을 갖고 해맑게 놀다 이내 울음을 터트려 주변을 숙연하게 했다.

양 총장은 조사를 낭독하던 중 순직 장병 4명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목이 메다 끝내 눈물을 보였

다. 태극기로 둘러싸인 순직자들의 관에 가족과 친지들이 헌화하면서 여기저기서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강 상사의 모친은 관을 부여잡고 “엄마를 왜 두고 가느냐”며 통곡했다.

이를 지켜본 장병들도 흐느끼며 눈물을 보였다. 영결식이 끝난 뒤 동료들이 고인의 관을 들고 건물 밖으로 나가자 유족들은 그 뒤를 따라 나가며 이내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박 중령의 한 유가족은 박 중령의 모친에게 “실컷 울어라. 아들에게 잘 가라고 해라”며 우는 모친을 다독였다.

장병들도 고인들을 향해 경례하며 마지막 배웅을 했다.

박 중령, 윤 상사, 강 상사는 이날 오후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된다.

이 소령은 이날 오후 유가족 뜻에 따라 고인의 고향인 경북 경산과 가까운 영천호국원에 안장된



다.

이들은 지난달 29일 오후 1시49분께 해군 해상 초계기(P-3CK)를 타고 포항기지 일대에서 이착륙 훈련 도중 이륙 7분 만에 인근 아산에 추락해 모두 숨졌다.

추락 사고로 숨진 승무원 4명은 1계급 추서 진급됐고 보통전공사상 심사위원회를 거쳐 순직으로 결정됐다.

해군은 지난달 31일부터 민·관·군 합동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김승호기자

“어차피 해고할 거니까 나가라”...출산·육아 제도, 여전히 ‘그림의 떡’



1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이처럼 출산과 육아를 이유로 불이익을 당한 상담 사례들을 공개하며

女 체감 더 뚜렷...‘사용 어렵다’ 男 비해 20% 높아

“여전히 적지 않은 직장인들에게 모부성 보호 제도 사용은 ‘모험’으로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단체에 따르면 최근 1년간(지난해 6월~올해 5월 말) 출산·육아 관련 ‘갑질’ 상담 및 제보는 총 58건이었다. 임신 사실을 알린 직후 권고사직을 강요받거나, 육아휴직 사용 이후 계약 해지를 통보받는 등의 사례가 다수 접수됐다.

상담 사례 중에는 육아가 단축근무를 신청한 직원에게 “기존 업무를 전부 혼자 해내라”는 지시가 내려지거나, 임신을 이유로 육체노동이 요구되는 부서로 발령난 경우도 있었다.

또한 임계제 공무원은 육아휴직 이후 재계약에서 불이익을 받았고, 동료로부터 “공무원보다 돈 많이 받으며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는 험담까지 들었다고 밝혔다.

제도는 있지만 사용은 어렵다는 인식도 여전히 높았다.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월 전국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

한 결과, ‘산전후휴가 사용이 자유롭지 않다’고 답한 비율은 36.6%, ‘육아휴직 사용이 자유롭지 않다’는 응답은 42.4%에 달했다.

특히 비정규직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모두에서 정규직보다 15%포인트 이상 ‘사용이 어렵다’고 답했고, 30인 미만 사업장·비노조 노동자일수록 제도 접근성이 낮았다.

5인 미만 민간 사업장 종사자의 경우 절반 가까이 “출산휴가 사용이 자유롭지 않다”고 답했다.

여성의 체감도는 더욱 뚜렷했다. 출산휴가 사용이 어렵다는 여성 응답은 47.7%로, 남성(27.7%)보다 20%포인트나 높았다. 육아휴직 역시 여성 49.2%, 남성 36.9%로 큰 차이를 보였다.

김세옥 직장갑질119 활동가는 “여전히 제도가 일터에 충분히 도달하지 못하는 구조에 대한 고민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새롭게 구성될 정부에서는 일터의 민주화, 젠더 평등의 관점에서 통합적인 정책 설계, 집행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희면기자